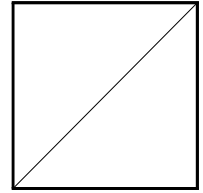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221 호 (2021)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2. 9. (제 3 차)	

(주)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 원 장 도 규 상
제출 연월일	2022. 2. 9.

## 1. 의결주문

(주)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주)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설명확인의무 위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이 적발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4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 3. 검사결과 지적사항

### 가. 설명확인의무 위반

- 과태료 15.6억원 부과

### 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과태료 12.5억원 부과

### 다.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 과태료 4.5억원 부과

### 라.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 과태료 49억원 부과

## 4. 참고사항

###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 나. 관계법규 : <붙임>

### 다. 관계부서 협의

-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2021.4.8.) 심의필

<별지>

(주)우리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내용

###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81억 6천만원 부과

- 조치사유 : ① 설명확인의무 위반
- ②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③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 ④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 법적근거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舊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7조(설명 의무) 제2항

舊 「자본시장법」 제57조(투자광고) 제6항

舊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1호, 제25호의2

舊 「자본시장법」(2017.4.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5호의2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제249조의5(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53조(설명 의무), 제60조(투자광고) 제3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2017.10.17.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14호, 제10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0호, 제271조의6(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舊 「금융투자업규정」(2021.3.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금융투자업규정」'이라 함) 제4-12조(투자광고의 방법·절차) 제1항,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9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8호

舊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17.10.19. 금융위원회고시 제201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

## 2. 조치사유

### 가. 설명확인의무 위반

□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주)우리은행 ▲▲지점 등 21개 영업점에서는 2017.8.28. ~ 2019.4.3. 기간 중 일반투자자 24명에게 라임 사모펀드 25건 122.8억원 및 헤리티지 신탁 1건 3억원을 판매하면서 펀드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 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주)우리은행 ▼▼지점 등 36개 영업점에서는 2017.8.28.~ 2019.4.4. 기간 중 일반투자자 42명에게 라임 사모펀드 43건 204.2억원, 헤리티지 신탁 1건 3억원 및 교보 사모펀드 1건 40억원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등의 수령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 하였음

## 다.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 「자본시장법」 제108조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펀드 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 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구분하며, 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는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에 해당(「자본시장법」 제286조,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

- (주)우리은행 ◀◀◀◀센터 등 3개 영업점에서는 2017.7.20.~ 2017.8.29. 기간 중 파생상품 투자권유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3명의 직원이 일반투자자 8명에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헤리티지 신탁 9건 27.2억원의 투자를 권유하였음

## 라.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 (주)우리은행 ▷▷▷▷▷센터 등 62개 영업점에서 2017.2.9.~ 2019.7.2. 기간 중 10,170명의 고객에게 사모펀드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총 15,084건 166회에 걸쳐 발송하는 과정에서
- 다음과 같이 투자광고시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누락,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 대한 투자광고 등 「자본시장법」상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하였음

###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내역(요약)

(단위 : 명, 건)

구 분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누락 (자본시장법 §57⑥)	적격투자자 아닌 자에 대한 광고 (자본시장법 §249의5)	합 계
수신고객	1,278	8,965	10,170 (중복 제외)
발송메시지*	2,270	12,814	15,084

\* 전체 발송메시지 15,084건 모두 준법감시인 사전확인이 누락되었으나,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한 12,814건을 제외한 나머지 2,270건에 대해서만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의무 위반을 적용하였음

※ 광고대상 상품명 : 라임 Top-2 밸런스 6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라임 무역금융 밸런스 6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라임 플루토-FI 1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라임 프리미엄채권 1Y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라임채권알파플러스 1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등

### (가) 투자광고시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누락 등

- 舊 「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주)우리은행 ▷▷▷▷▷▷▷▷▷센터 등 41개 영업점에서는 2017.2.9.~2019.4.10. 기간 중 1,278명의 고객에게 81회에 걸쳐 사모펀드 상품을 안내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2,270건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나)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 대한 투자광고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5 등에 의하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투자자예탁금 잔액을 포함함)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 (주)우리은행 ♡♡♡♡♡♡♡♡♡센터 등 52개 영업점에서는 2017.3.31.~2019.7.2. 기간 중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 8,965명에게 14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12,814건을 발송하여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였음

< 붙임 >

## 관 계 법 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49조의5(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전문투자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할 것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설명 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투자광고)** ③ 금융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집합투자증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투자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
  2.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 ④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서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그 밖에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1. 제47조제2항(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 25의2. 제57조제6항(제117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4.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5의2. 제57조제6항(제117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③ 법 제108조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함

10. 그 밖에 수익자의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271조의6(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① 법 제249조의5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투자자에 탁금 잔액을 포함한다)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5제2호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57조제3항 및 이 영 제6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체를 통하여 전문투자자 또는 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자에게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개정 2021. 3.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설명의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구조와 성격
2.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4.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자문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투자자문업자가 제60조제3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종류와 범위
  - 다. 투자자문 제공 절차와 투자자문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규모 및 산정방식
  - 라. 그 밖에 투자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60조(투자광고)** ① 법 제5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③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사전 확인을 받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를 것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개정 2017. 10.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타. 법 제47조제2항(법 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1호	6,000
버. 법 제57제6항(법 제117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5호의2	10,000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10.17.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신설 2015. 3.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보. 법 제57제6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5호의2	3,000

☐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109조제3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함

28.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 舊 「금융투자업규정」 (2021.3.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2조(투자광고의 방법·절차) ① 영 제60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1.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
2.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실태평가결과와 순자본비율, 영업용순자본비율, 최소영업자본액 등을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그것과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광고하지 아니할 것

3.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을 것
4. 투자광고계획신고서와 투자광고안을 협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것
5. 협회의 투자광고안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6. 투자광고문에 협회 심사필 또는 준법감시인 심사필을 표시할 것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정한다.  
(1) 영 제132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109조제3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함

29. 특정금전신탁계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정금전신탁 및 제20호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시입출방식으로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을 체결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정한다.  
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나. 설명서에 갈음하여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교부하는 경우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 舊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17.10.19. 금융위원회고시 제201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운용과	일반은행검사국
연 락 처	02-2100-2663	02-3145-7062